

[ 종합 ]

‘BBK 김정준’ 송환... 정치권 전방위 충돌

“李후보 사퇴를” “네거티브 말라”

(명박)

신당·창 “李후보 검찰 출두 자백해야”  
한나라 “공은 검찰로...공정수사 촉구”

대선정국의 마지막 뇌관인 BBK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 김정준씨가 16일 오후 귀국함에 따라 정치권이 태풍의 한복판으로 빨려들고 있다.

◇범여권·이회창 공세=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은 김씨의 송환을 최대의 대선 승부처로 보고 전면적인 공세에 들어갔다.

특히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이 BBK 의혹 등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의 사퇴를 본격 거론하고 나서면서 김정준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치권의 공방은 후보 사퇴문으로까지 변질 조짐이다.

정동영 후보측 김현미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검찰과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 이 후보는 더 이상 도망 다닐 길이 없다”며 “추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후보는 즉각 검찰에 출두해 모든 것을 자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기소되면 당연히 한나라당 후보 자격을 상실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 감사재 전략기획

팀장도 “(이명박 후보는) 대선후보직 사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고 압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관심은 온통 김정준씨 귀국에 쏠려 있다. 이명박 후보로 인한 문제가 전 국토를 혼돈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이 같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제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대통령 후보직 사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박형준 대변인은 “오려진 퇴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회창 후보다. 이 후보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김정준 사건의 실체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며 “그의 압송을 계기로 신당의 일방적 네거티브 공세가 ‘헛방’임을 최종 확정하는 일반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년 전 김대업을 ‘의인’으로 치켜세웠던 여권은 다섯 개의 이름을 가진 사나이 김정준이 만들어낸 위조문서를 흔들며 대면서 ‘은인’으로 만들기 위해 활안이 되어 있다”며 “이번 사건은 고도의 지능범죄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벌인 사기행각을 밝혀내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이 사건



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득을 보려는 세력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변질돼 시끄럽고 말이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6년 만에 귀국해 처벌받겠다고 나선 이유가 흡집내기를 위한 밀약이나 정치공작에 의한 것이 아닐진 되어 있다”며 “이번 사건은 고도의 지능범죄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벌인 사기행각을 밝혀내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이 사건

BBK 추가조작 2001년 美로

李후보와 2000년 악연 시작

김정준은 누구

김정준씨는 지난 1999년 설립한 투자자문사 BBK의 전 대표로 추가조작과 횡령 사건에 연루돼 2001년 미국으로 도피했다.

1966년생인 김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6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코넬 대학 졸업했다. 미국 이름은 크리스토퍼 김(Christopher Kim)이다. 대학 졸업 뒤 모건스탠리에 근무하는 등 ‘30대 투자 천재’로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과장 상품 분야에 밝아 ‘BBK 투자자문’을 설립했다. 그러나 2001년 3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BBK가 투자자들에게 위조된 펀드운용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됐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떠났다가 2000년 귀국한 이 후보는 같은 해 2월 자신과 김씨의 영문이 붙은 첫 글자를 딴 ‘LKe뱅크’라는 금융투자사를 설립했다. 여기서부터 이 후보와 김씨의 악연이 시작된다. 이 후보는 이듬해 BBK의 불법사실이 드러나자 2001년 4월 LKe뱅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김씨와 이어진 2년2개월여의 관계를 청산했다.

시 설

경기회복, 지방건설경기에 달려 있다는데

최근 크게 위축된 지방 건설경기가 고용과 소비 등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최근의 지방경제동향’에 따르면 3·4분기 지방의 건설수주액은 16조4천28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비해 17% 감소했다. 지난 2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43.3%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감소세로 급반전한 것이다.

건축허가면적도 지난해 3분기에 비해 21.5% 줄었고, 미분양아파트 역시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등 급증 추세에 있다. 지방 건설경기가 죽을 췌고 있는 셈이다.

지방 건설경기의 위축은 경제를 극도의 침체 높여로 빠뜨리고 있다. 한은은 “지방 건설경기 부진이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와 고용 등 본격적인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 건설경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한은의 이 같은 분석은 당연하다. 실제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 소비와 고용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유흥업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방 주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광주·전남은 더욱이 내년에 대규모 개발사업도 없어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도 건설업체의 도산이 잇따르는 등 지역 건설업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건설업은 물론 경제 전반이 회복 불능의 사태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어느 늦기 전에 지방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광주, 교통사고율 전국 최고 부끄럽다

광주시의 교통사고율이 전국 최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를 상대로 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의 교통문화가 어찌다가 전국 ‘골짜기’로 떨어졌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한 광주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자동차 주행거리 1억km당 77.38건으로 7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59.0%로 전국 평균 38.5%나 대도시 평균 47.4%를 크게 웃돌았다. 초등학교 어린이의 교통사고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율이 높아 ‘교통문화 후진국’의 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광주가 교통사고율 최고라니 한심하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고 광주의 교통문화는 여전히 낙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율이 높은 원인은 잘못된 교통문화와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광주는 어느 도시보다 운전허가 합당성이 평가를 받고 있다. 무리한 끼어들기와 과속, 불법 U턴, 무단횡단 등이 횡행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안전띠 미착용과 음주운전,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잘못된 교통문화는 바로 잡아야 한다. 보행자 사망률이 높은 것은 운전자들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급증하는 차량에 비해 교통안전시설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운전자를 비롯 시민 모두가 노력해 교통사고율 전국 최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태풍 ‘나리’ 피해 버 전량 매입

전남지역 3만여포대... 피해농가 부담 줄듯

정부가 지난 9월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상품성이 떨어진 벼를 모두 사들이기로 해 전남지역 피해농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부는 16일 쌀 공공비축물량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잠정등외’ 규격을 신설, ‘나리’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아졌거나 색이 변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벼 4만 5천 포대(40kg들이)를 전량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등외 벼 매입에는 모두 14억원이 투입된

다. 가격은 1가마당 3만 1천원을 우선 지급한 뒤 공공비축 쌀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기로 했다.

전남지역에서 태풍 ‘나리’로 인해 품질이 떨어진 벼는 3만 50포대(40kg들이)로 파악됐으며 전남도는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 전량 구매를 건의했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대통령 특검법 거부 검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는 16일 여야 정치권에 이른바 ‘삼성비자금 특검법’의 재검토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이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는 보충성과 특점성의 원칙에 맞도록 특검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특검법 논의와 함께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을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circulation data.

발코니 확장 비용

과다 책정 못한다

건교부, 연내 가이드라인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기가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부풀려 입주민들의 실질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12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은 전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어서 이들 주택은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심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유도, 실질적인 분양가 안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영광 흥농읍~백수읍 연결 칠산대교 조감도

따른 공청회를 여는 등 칠산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과 익산시방목도관리청은 최근 영광에서 주민을 상대로 교량 실시 설계에

전남, 내년 SOC예산 절반 동부권 투자

엑스포 개최 기반 조성 등 1조 이상 투입

내년 전남도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국고지원 예산 가운데 50%를 넘는 액수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전남 동부권에 집중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SOC 분야 국고지원 예산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되

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조 원 이상이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기반 조성 등 동부권의 SOC 확충에 투자된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 계획은 전주~광양 고속도로 3천645억원, 목포~광양 고속도로 2천444억원, 여수~순천

국도17호선 확장 220억원, 벌교~주암 국도 27호선 확장 125억원 등이다. 또 소록~거금도 연륙교 207억원,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248억원, 순천~여수 철도개량 사업비 820억원, 전라선 복선 전철화 620억원, 동순천~광양 경전선 개량 420억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302억원,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 2천497억원 등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평균 6.1% 오른다

이달분부터 세대당 3,720원 인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1월부터 평균 6.1%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2006년도 귀속소득과 올해 변경된 재산과표를 적용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며, 해마다 국제경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년도 귀속소득과 당해 연도 재산자료를 받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예년

수준(2003년 6%, 2004년 6.3%, 2005년 5.5%, 2006년 6.2%)인 평균 6.1%(세대 당 평균 월 3천720원) 오른다.

하지만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810만 세대 중에서 321만 세대는 인상되는 반면, 116만 세대는 내려가고, 373만 세대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밝혔다.

또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전국 지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이 조정된 보험료 고지서는 23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그건 떨어져 봐야 압니다